

농식품부 “산단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동반성장 기대”

오늘부터 1315개 산단 입주 가능
고품질 원료·소재 작물 연중생산
인접 공장서 가공제품 제조해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생태계 강화

이달부터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팜의 한 갈래인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정부가 농업 및 후방산업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농산물 생산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직농장 산업은 일자리 창출, 미래농업 확산, 에너지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의 입주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3월26일 경기 평택에 자리한 수직농장 전문기업을 찾아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부문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

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비롯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또 K-수직농장 세계화 프

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소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하게 된다. 또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해,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9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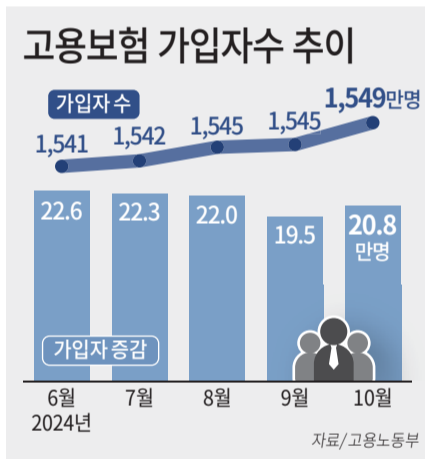
고용부 ‘올해 10월 노동시장 동향’
지난해 1.4% 늘어… 9개월 만 반등
추석 명절 영향 구직급여 신청 사례 ↑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 증가하며 9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감소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 (20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



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감소하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지난 5월 8000명,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99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2만1000명 증가한 58만7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1조6억원으로 9.9% (903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10월의 경우, 추석 명절이 9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

강경성 “세계 5대 수출강국 향해 총력”

(코트라 사장)

“수출 주체·품목·시장 발굴” 강조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사진)이 11일 취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계 5대 수출강국, 투자대국,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향한 코트라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며 “혁신기술기업은 수출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수출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애로해소 등 수출 전 과정



을 연속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바이오·방산·서비스 등 전략 산업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전문 수출지원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경제통상 환경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위기신호와 시장기회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사우스 부상 등 지역별 기회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수립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1580억 규모… 올해 300억 투자

환경부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전 세계적인 녹색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고,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산업 분야의 해외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 사업 투자와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 및 운용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 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 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인 2026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대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환경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돼지 사육 두수가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 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규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해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명시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운영 실적 평가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